

# 전세계 난민 7,100만 명 '사상최고'

전세계 난민이 지난해 기준 7,100만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초에 한명꼴로, 하루에 3만5,000여명 이상이 집을 떠나 강제 이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등이 뒤를 이었다.

시리아 난민은 행선지로 터키를 362만 명이나 택했고, 인접국가인 레바논이나 요르단 등도 주요 종착지로 택했다. 독일에도 58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이 몰렸다. 아프간에서는 파키스탄(140만 명)이 가장 많

지난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BBC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25년간 전세계 난민 수가 3배 급증해 지난해 7,080만명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전세계 난민의 70%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 등 5개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발생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경제난, 내전, 소수민족 학살, 자연재해 등이 꼽혔다.

전체 난민 중 절반 이상인 4,140만명은 해외 대신 국내에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경을 넘어 해외로 향하는 이들은 2,590만명, 해외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은 350만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난민 중 최다를 차지한 것은 시리아(1,300만 명)인이었으며 이어 콜롬비아(800만 명), 콩고인(540만 명)

이 몰린 가운데, 독일은 3위(19만여 명) 행선지로 꼽혔다. 독일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온화한 난민 정책을 펼치면서 몰리는 난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의 집단학살을 겪어야 했던 로힝야족들은 방글라데시로 가장 많이 몰렸다.

문제는 앞으로도 난민이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새로운 난민 발생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BBC에 따르면 자국 내에서 강제 이주를 한 이들의 숫자는 총 1,720만 명으로 각종 갈등 상황으로 인해 강제 이주한 이들 1080만 명을 뛰어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난민수가 올해는 2,200만명까지 늘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미국, 재작년 '북한인 입국 금지' 후 83명 예외적 입국 승인

2017년 9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 명령에 따른 '미국여행금지' 대상국에 포함된 후 2년간 예외적으로 미국 입국 승인을 받은 북한국적자가 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5일 '연합뉴스'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이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영사과의 에드워드 라모토우스키 입국사증담당 부차관보는 전날, 재작년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 금지조치 이후 그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15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입국 승인 신청을 했고, 그중 약 72%인 83명에 대해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5명은 여행금지 조치 적용을 면제받았고, 78명은 예외적 승인대상이었다.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북

한 국적자는 총 33명이며, 이들 중 국제기구 직원용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RFA는 소개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9월 반이민 수정명령을 통해 해당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 국적자는 이민 및 비이민 목적의 미국 입국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미국의 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경우, 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명령 발효 당시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 입국이 이미 승인된 난민과 외교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중남미 지역 국민 절반 이상 "부패 늘었다"

중남미 각국 정부가 저마다 '부패 척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남미 국민 절반 이상은 오히려 1년 전보다 부패가 늘었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날 펴낸 '2019 국제부패지표 - 중남미·카리브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18개국 1만7천 명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가 지난 1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부패가 줄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민 중 87%가 1년 새 부패가 심화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9%에 그쳤다. 57%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봤다.

오히려 응답자의 85%가 정부의 부패가 큰 문제라고 답했고,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대통령과 총리, 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뇌물도 만연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로 지난 1년간 경찰과 학교,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 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멕시코는 3명 중 1명 이상인 34%가 지난 1년간 뇌물을 줬다고 답해 뇌물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코스타리카로 7%가 1년간 뇌물 경험이 있었다.

뇌물을 준 대상은 경찰(24%)이 가장 많았고, 뇌물을 준 이유로는 '상대가 요구했기 때문' (3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공권력 등에 성 착취를 당했거나, 또는 당한 이를 안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TI는 "부패는 경제 발전과 공공 서비스 수행을 막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까지 박탈하기도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